

미 대선에 따른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트럼프 대통령 재선의 경우

| 요약 |

- 미 대선을 앞두고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또한 존재하므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산업정책 변화에 대한 검토 필요
 - 1기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정책은 미국 우선주의(America First) 기치 아래 산업, 무역, 안보가 상호작용하는 혼합 정책(mixed policy) 형태
-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1기 행정부의 주요 산업정책 기조 유지 및 강화
 - 감세 및 규제 완화, 인프라 산업과 핵심 첨단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, 공공사업 및 공공조달 시 자국산 우선 정책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 추진
 - 첨단 산업 관련 수출안보정책 강화와 동맹국 협력을 통한 미국 중심 가치사슬 재편을 추구하여 탈중국 전략 추진
- 인공지능, 양자컴퓨터, 5G 등 신기술과 반도체, 배터리 등 첨단 제조산업, 전통적 에너지 인프라 산업 육성
 - 인공지능, 양자컴퓨터, 5G를 중심으로 핵심 첨단기술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나 해당 산업 내 중국 기업 배제는 지속
 - 첨단 제조산업 해외 의존 탈피를 위한 반도체, 배터리 산업 제조시설 미국 유치 확대와 미국 중심 공급망 강화 추진
 - 원자력, 셰일가스, 석탄발전 등 전통적 에너지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에너지 공급망 확대 노력
 -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점 제한 강화에 찬성하나 타 국가의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에 강경한 대응을 시사하여 미국 우선주의 피력
-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산업 대응 시사점
 - ① 기존 산업정책 기조 유지로 기업 부문의 정책변화 위험은 크지 않으나 트럼프 개인 성향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재선 초기 발표 정책 분석 필요
 - ②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인프라 투자, 공공조달 및 공공사업 등의 참여 확대와 산업별 육성 정책에 따른 기회 요인 발굴을 위해 대응 전략 필요
 - ③ 안보정책과 결합된 미국 중심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과 산업의 기회 요인 점검 필요
 - ④ 중국과 디커플링(decoupling) 지속·강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대응 전략 필요

1. 미 대선 향방과 산업정책

▣ 2020년 11월 3일 미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나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능성 또한 존재하므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산업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

-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나 대표 경합주의 지지자 결집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.¹⁾
- 1기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정책은 미국 우선주의(America First) 기치 아래 산업, 무역, 안보가 상호연계된 혼합 정책(mixed policy) 형태
 - 자국 물자 우선 구매와 자국 생산 강화 정책을 위한 “Buy American”, “Made in America” 슬로건하에 미국 제품 우선 구매, 기업 리쇼어링 추진, 조세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활력 제고, 보호무역 및 양자 무역협정 우선, 안보 이슈와 결합된 대중국 견제 심화로 산업·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

2.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산업정책 방향

▣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은 지난 4년의 정책 기조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

- 1기 산업정책 기본방향 유지로 기업 부문 정책변화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으나, 트럼프 대통령 개인 성향에 따른 불확실성 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미·중 갈등 심화에 따른 통상 위험 확대 예상
- 감세 및 규제 완화, 인프라 산업과 핵심 첨단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, 공공사업 및 공공 조달 시 자국산 우선 정책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 추진
 - 법인세 감면(최고 세율 35% → 21%) 유지, 개인소득세 감면(최고 세율 39.6% → 37%) 연장 등 조세감면 정책과 기업 규제 완화 지속
 - 재정지출을 통한 투자는 인프라 산업과 핵심 첨단기술에 집중하여 교통, 수도 및 광대역 통신, 5G 등에 약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와 인공지능(AI),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및 보건부문의 R&D 투자 확대
 - “Buy American” 기조 강화로 공공 기반시설 공사에 미국산 제품 사용 의무 비중 상향 조정,

1) “Latest 2020 Presidential General Election Polls”, Realclearpolitics 웹사이트, <https://www.realclearpolitics.com>(접속일: 2020. 10. 27).

특정 미국산 의약품·의료장비 정부 구매 의무화, 공공조달시장 내 미국산 우선 정책 등 시행

- 첨단산업 관련 안보정책 강화와 동맹국 협력을 통한 미국 중심 가치사슬 재편을 추구하여 탈중국 전략 추진
 - 수출안보를 위해 첨단·신기술 부문에 대한 수출 통제권을 확대하여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(화웨이, 위챗, 틱톡 등)
 - 기업 리쇼어링 및 미국 중심 공급망 강화 추진으로 우방국의 가치사슬 참여 가능성 확대

〈표 1〉 트럼프 대통령 주요 산업 정책 이슈

정책 이슈	주요 내용
미국 내 생산·구매 우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규모 공공 기반시설 공사 및 특정 의약품·의료장비 부문에 대한 미국산 제품 사용 의무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량, 도로, 철도 등의 공사 시 미국산 제품 사용 의무 강화 (의무 비중 50% → 최대 75%, 철 및 철강제품 최대 95%) - 특정 미국산 의약품과 의료장비에 대한 정부 구매 의무화
공공조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국 공공조달시장 내 해외 기업 참여 축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WTO의 정부조달협정(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, GPA) 개혁 요구 및 탈퇴 검토 중 - GPA 협정 탈퇴 시 미국산 우선 구매 규정(Buy American Act) 적용
통신·안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첨단·신기술 부문에 대한 수출 제한조치 및 통제권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(화웨이, 위챗, 틱톡 등) - 안보상의 수출 중단(홍콩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 중단)
조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액 감면 및 기업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인세(최고 세율 35% → 21%) 유지, 개인소득세 감면(최고 세율 39.6% → 37%) 연장, 패스스루(pass-through) 기업 공제 연장(20%),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(23.8% → 15.0% 또는 18.8%)
인프라 및 R&D 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인프라) 약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규모 교통기반 인프라 투자(8,100억 달러), 수도 및 광대역 통신 등 기타 인프라 투자(920억 달러) • (R&D) 전반적 R&D 예산 축소, 특정 핵심기술(비국방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)과 보건 부문 예산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2021년 예산) 전체 정부 R&D 예산 약 9% 축소,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에 대한 예산(총 17억 달러) 2020년 대비 30% 증가 - R&D 우선순위로 감염병 모델링, 예측 및 진단, 백신, 치료 포함

자료: ITIF(2020), "Trump vs. Biden: Comparing the Candidates' Positions on Technology and Innovation"과 2020년 10월 19~20일 양일 간의 'ITIF-KIET 미 대선 공동화상 세미나' 내용 정리.

3.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산업별 이슈

■ 인공지능, 양자컴퓨터, 5G 등 신기술과 반도체, 배터리 등 첨단 제조산업, 전통적 에너지 인프라 산업 육성

- 인공지능(AI), 양자컴퓨터, 5G를 중심으로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예정이나 해당 산업 내 중국 기업 배제 기조는 지속 예상
 - 2020년 핵심 및 신기술 국가 전략(2020 National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)을 통해 첨단기술 육성과 보호에 초점
- 첨단 제조산업 해외의존 탈피를 위한 반도체, 배터리 산업 제조시설 미국 유치 확대와 미국 중심 공급망 강화 추진
 - 반도체 제조강화 법안(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for America Act, CHIPS Act), 파운드리 법안(American Foundries Act), 에너지 저장장치 로드맵(Energy Storage Grand Challenge) 등을 지지함으로써 미국 및 해외 반도체 기업의 제조공장 미국 이전과 제조시설 확대를 통해 신기술의 핵심 자원인 반도체, 배터리 등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중심 공급망을 형성
- 원자력, 셰일가스, 석탄발전 등 전통적 에너지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망과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기후변화 문제 또는 탄소배출 논의는 지속 배제
 - 석탄발전, 그리드 현대화, 이산화탄소 포집기술(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, CCUS) 연구개발 확대, 미국 원자력 기술 수출과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부문 국제협력 장려
-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점 제한 강화에 찬성하나 타 국가의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디지털 세 부과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시사하며 미국 우선주의 피력
 - 통신품위법(Communications Decency Act, CDA) 230조 규정 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책임 명확화,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강력 규제 의지 표명
 -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(Digital Services Taxes, DSTs)를 부과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의사 발표로 미국 우선주의 견지

〈표 2〉 트럼프 대통령 산업별 이슈

주요 산업	주요 내용
온라인 플랫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형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점 제한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통신품위법(Communications Decency Act, CDA) 230조 규정 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책임 명확화,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강력 규제 의지 표명 - 중국 소유의 모바일 앱(틱톡과 위챗) 사용 금지 조치 • 타 국가의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에 강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국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(Digital Services Taxes, DSTs)를 부과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관세 부과 의사 발표
반도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CHIPS 법안(CHIPS Act) 지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국 및 해외 반도체 기업의 제조공장 미국 국내 유치 목적 • 파운드리 법안(American Foundries Act) 지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확대 목적
배터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국 내 배터리와 기타 저장장치·시스템 공급망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터리산업의 핵심인 리튬이온배터리 원자재 및 생산의 해외 의존 탈피를 위한 에너지 저장장치 로드맵(Energy Storage Grand Challenge) 발표
에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정에너지 공급망과 혁신 제조기술 연구에 초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석탄발전, 그리드 현대화, 이산화탄소 포집(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, CCUS) 기술 R&D 확대 - 미국 원자력 기술 수출과 CCUS 부문 국제협력 장려 •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정책적 고려 부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파리협정 탈퇴, 청정에너지 부문 인프라 투자 및 세제 혜택 지원안 부재
첨단·핵심 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국 기업 배제 기조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 기업 배제와 첨단기술 및 데이터 보안 강화를 위한 클린 네트워크(Clean Network) 구축 및 주요국 참여 독려 • 인공지능, 양자컴퓨터, 무선대역 및 5G 부문 투자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0년 핵심 및 신기술 국가 전략(2020 National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)을 통해 재래식 무기, 인공지능, 반도체, 우주 등을 핵심 및 신기술로 정의 - 2021년 인공지능 부문(15억 달러)과 양자컴퓨팅 부문(6억 9,900만 달러) 투자 확대 - (인공지능, AI) '미국 AI 이니셔티브' 출범, G7의 'AI 글로벌 파트너십' 가입을 통한 인공지능 기술 혁신 및 산업 육성 지원 - (양자컴퓨터, Quantum Computing) 초기 5년간 양자 연구에 1조 4,600억 원 투자, 양자 정보과학 국가전략, 양자연구 집중 지원법, 양자경제개발 컨소시엄 등 정책적 기반 마련 - (무선 대역(Wireless Spectrum) 및 5G) '5G 패스트 플랜' 수립, '국가 스펙트럼 전략' 수립을 위한 부처 간 태스크포스(TF) 출범, 대선 공약에서 국가적 고속 무선 인터넷망 구축 주장

자료: ITIF(2020), "Trump vs. Biden: Comparing the Candidates' Positions on Technology and Innovation"과 2020년 10월 19~20일 양일 간의 'ITIF-KIET 미 대선 공동화상 세미나' 내용 정리.

4.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산업 대응 시사점

① 기존 산업정책 기조 유지로 기업 부문의 정책변화 위험은 크지 않으나 트럼프 개인 성향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재선 초기 발표 정책 분석 필요

- 미국 우선주의를 유지하면서 감세 및 규제 완화 중심의 산업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소수 핵심 첨단산업에 대한 제한적 재정지출 지속
- 민간 자율 중심의 산업정책 기조로 1기의 산업정책이 많지 않은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이 더하여 정책발표가 저조하였음.
- 따라서 재선 시 초기 발표 정책의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필요
- 바이든 후보의 당선 시에도 정권교체 이전 트럼프 행정부가 마지막으로 획기적 정책을 단행할 가능성 또한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

②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의 공공조달 및 공공사업, 인프라, 신기술 투자 확대와 산업별 육성 정책에 따른 기회 요인 발굴을 위해 대응 전략 필요

- 교통·통신 등 인프라 산업 및 첨단산업 R&D 투자 확대에 대한 국내 기업의 기회 요인 파악 및 산업 대응 필요
 - 5G, 보건의료,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등 국내 산업의 강점을 활용한 인프라 투자 및 신기술 개발 투자 정책에 대한 참여 확대 고려 필요
- 반도체, 배터리 등 첨단 제조산업 미국 내 제조 촉진 정책에 대한 국내 관련 산업의 대응 전략 필요
- 특히 첨단 제조산업과 신기술 부문에서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 공급망 강화 추진으로 국내 산업의 기회 요인 발굴 필요
- 미국의 자국산 우선 정책은 해당 산업 내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과 한국 기업의 오프쇼어링을 초래할 가능성 존재
- 공공사업 및 공공조달의 미국산 우선 구매 정책은 외국 제조·생산 기업의 판매 기회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, 따라서 해당 산업 내 기업의 현지화 전략 고려 가능성 증대
- 국내 기업의 오프쇼어링 전략은 국내 관련 산업기반 위축 가능성 있음.

③ **안보정책과 결합된 미국 중심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과 산업의 기회 요인 점검 필요**

- 기존 가치사슬은 국제 분업을 통한 비용 최적화를 목표로 하나 향후 재편 방향은 국가안보 정책과 결합된 새로운 형태로 변화 전망
- 중국 기업 배제 기조 강화로 우방국으로서 국내 기업 참여 기회 증대를 위한 산업 대응 전략 필요
- 5G 인프라 투자 사업의 클린 네트워크(Clean Network) 기업의 참여 가능성 증대처럼 국내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안보 이슈를 고려한 산업 대응 전략 필요

④ **중국과 디커플링(decoupling) 지속·강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대응 전략 필요**

- 수출 제재 참여, 경제 번영 네트워크(Economic Prosperity Network, EPN) 가입 등 대중국 제재 참여 요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장기 관점의 대응 필요
-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의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한 위험 완화(hedge) 노력 필요

